



주간 통일정세

2013-28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동향 2. 대외관계 3. 대남동향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의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내동향

가. 정치

- **北 김정은, 김일성 19주기에 금수산궁전 참배(7/8,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김일성 주석 19주기를 맞아 김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8일 보도함.
 - 통신은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민족 최대 추모의 날인 7월 8일 0시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김일성·김정일 대원수님께 송고한 경의를 표시했다"고 밝힘.

- **北 김정은 "전승기념관 개관식 성대히 하려 한다"(7/11,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개관을 앞둔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전승기념관)'을 돌아봤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1일 전함.
 - 김 제1위원장은 "전승기념관 개관식을 성대하게 하려고 한다"라며 "전승기념관은 나라의 보물고, 반미 대결장, 반미교양의 중요 교양거점"이라고 강조함.

- **北 내각 확대회의 개최...경제성과 독려(7/14,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최근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개최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제시한 호소문 '마식령속도를 창조하여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자'의 과업을 결사관철하는 문제를 토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4일 보도함.
 - 또한 내각은 회의에서 올해 상반기 인민경제 수행 상황을 평가하고 3·4분기 경제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대책을 토의했으며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마식령스키장 건설과 세포동판 개간, 청천강 계단식 발전소 건설, 과학자 살림집(주택) 건설 등을 경제 성과로 언급함.
 - 회의에는 박봉주 총리와 로두철 부총리 등 내각 간부와 도·시·군 인민위원회 위원장, 도농촌경리위원회 위원장, 도지구계획위원회 위원장, 도식료일용공업관리국 국장, 주요 공장 및 기업소 지배인들이 참석함.



■ 김정은동향

- 7/8, 김정은 黨 제1비서, 7.8 0시 '김일성 사망(7.8)' 19돌 즈음 금수산태양궁전 방문 및 '김일성·김정일에게 경의 표시'(7.8, 중통·중방·평방)
- 박봉주·최룡해·장성택·김격식·장정남·김원홍·현철해·최부일·주규창·김경옥 등 참가
- 7/11, 김정은 黨 제1비서, 개관을 앞둔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방문(7.11, 중통·중방·평방)
- 박봉주·최룡해·김기남·최태복·김영일·김양건·김평해·곽범기·문경덕·한광상·리재일·박태성·조경철이 동행
- 7/14, 김정은 黨 제1비서, "금수산태양궁전을 더 잘 꾸리는데 이바지"한 설철수(국가건설감독성 처장) 등에게 '감사' 전달(7.14, 중방)

■ 기타 (대내 정치)

- 박봉주(내각총리), 황해제철연합기업소 현지 요해(7.8, 중통)
- '김일성의 한평생은 인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여온 애국애족의 한평생, 세계 자주화를 위한 성스러운 한평생이었다'고 높이 칭송(7.8, 중통·노동신문·평방)
- 김영남을 비롯한 당·국가 책임일꾼들 등, 7.8 금수산태양궁전 참배(7.8, 중통·중방)
- 全민은 '상반년 강성국가건설 투쟁성과에 자만하지 말고 김정은의 신년사에 제시된 과업관철 투쟁에 더 큰 박차를 가하라'고 독려(7.10, 중방·노동신문·중통)
- 최룡해(총정치국장), 조국해방전쟁 사적지 사적건물들의 영구보존 실태와 관리정형 현지요해(7.13, 중통)

나. 경제

● 北, 제품 질 제고 위한 인센티브 강조(7/1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4일 '질 제고에서 경제적 공간의 효과적 이용'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모든 근로자들이 생산물과 건설물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독려하고 경제부문 간부들이 제품의 질을 보장하려면 상벌을 옹계 적용해야 한다며 "모든 생산자들이 제품의 질적 과제를 넘쳐 수행하였을 때에는 상금이나 장려금을 주고 불합격품을 냈을 경우 변상도 시켜야 한다"고 밝힘.

다. 사회·문화

● 北, 대동강·청천강 홍수위험 예보(7/9,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방송은 9일 '장마철 통보'에서 장마전선이 10~11일 평안도 청천강 유역에서 강해지고 평양과 함경남도, 강원도의 대부분 지방에서



100~200mm, 일부 지역에서 300mm 이상의 폭우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12일부터 15일 내리는 비에 의해 대동강의 대동교지점, 비류강의 성천, 청천강의 안주, 압록강의 신의주 지점들에서는 위험 수위에 도달할 것으로 예견된다"고 밝힘.

- **'북한 걸그룹' 모란봉악단 등장 1년...활약상 띄우기(7/9,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9일 '강성국가 건설의 대진군을 선도해 나가는 제일 나팔수'라는 제목의 글에서 "모란봉악단은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의 최후 승리를 위한 대진군을 선도하는 제일나팔수"라며 "우리 군대와 인민을 새로운 시대정신 창조로 추동했다"고 보도함.
 - 신문은 "모란봉악단이 형상한 모든 작품들은 우리 인민들 속에 널리 알려진 노래들이지만 완전히 새로운 느낌과 열정, 낭만을 안겨줬다"며 모든 음악적 요소들을 "세계적 수준에서 우리식"으로 만들었다는 점을 강조함.
- **北 '이순신 만화 만들자'...역사인물 애니메이션 장려(7/10, 연합뉴스; 조선예술)**
 - 북한 월간지 '조선예술' 6월호의 '영화의 장르와 형식, 형상수법을 새롭게 다양하게 개척하자'라는 제목의 글에서 "만화영화 창작에서 혁명을 일으켜야 한다"며 동물이나 식물을 의인화한 캐릭터를 사용하기보다는 "강감찬, 이순신, 을지문덕과 같은 애국명장들"을 등장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연합뉴스가 10일 보도함.
- **북한 그리스도교연맹 새 위원장 강명철 목사(7/10, 연합뉴스)**
 - 북한의 조선그리스도교연맹(조그련)이 새 위원장에 강명철 목사를, 부 위원장에 리정로 목사를 선출했다고 연합뉴스가 10일 보도함.
- **북한 적십자회 위원장 강수린으로 교체(7/11, 연합뉴스)**
 - 연합뉴스가 11일 국제적십자사연맹(IFRC)의 회원 명부를 확인한 결과, 올해 5월 8일 기준으로 '강수린'이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으로 변경등록됐다고 보도함.
- **北, 홍수 대비 댐·저수지 수위 조절(7/11,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방송은 11일 "오늘까지 예견되는 비량(강우량)에 의하면 대동강의 대동교 지점에서 수위가 1단 유보도(강변 산책로), 4.6m를 넘어설 것"이라며 "서해 갑문호에서 사전 방출을 계속해야 한다"고 보도함.
 - 방송은 "비가 계속 내릴 것으로 예견되는 조건에서 대동교 지점의 수위는 계속 높아져 오늘 오후에 7~8m까지 높아지겠다"고 예상하면서 "임진강 유역의 예성호에 13일까지 2.5억m³의 물이 들어와 수위가 정상 수위인 107m를 초과할 것"이라며 "사전에 물을 방출해 현재 수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힘.



- 北 "머리는 짧고 단정하게" 강조(7/1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1일 '사회주의 생활양식에 맞게'라는 제목의 글에서 "건전한 사상의식과 높은 문화적 소양, 고상한 품성을 가진 사람일수록 머리 단장을 고상하게 한다"며 "머리단장 하나를 해도 민족적 정서와 시대의 요구에 맞게 잘함으로써 우리 인민의 고상하고 아름다운 풍모를 보여줘야 한다"고 보도함.
 - 신문은 "사회에 갓 진출한 처녀들이나 대학생들의 머리는 지나치게 복잡하지 않은 단순한 머리 형태들인 단발머리, 땡은 머리로 단장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하고 "남자들이 머리를 보기 좋게, 짧게 깎고 다니면 고상하고 단정하고 쾌기와 정열이 넘쳐 보이며 혁명하고 투쟁하는 시대에 사는 우리 인민들의 고상한 정신세계를 엿보게 할 수 있다"고 밝힘.
- 北, 마식령 스키장 건설 '지원열풍' 선전(7/12, 조선중앙방송)

 - 북한이 최근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강원도 마식령 스키장 건설사업을 돕기 위해 북한 전역에서 기관과 주민들의 지원이 잇따르고 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12일 보도함.
 - 방송은 "각지 일꾼들과 근로자들, 청소년 학생들의 적극적인 원호에 고무된 군인 건설자들은 마식령 스키장 건설에서 날마다 혁신을 창조하고 있다"고 강조함.
- 北, 금수산태양궁전 광장공원 일반에 개방(7/12, 조선신보)

 -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 광장이 지난 8일부터 일반에 개방됐다고 조선신보가 12일 전함.
 - 북한은 작년부턴 '주체의 최고성지'로 꼽히는 금수산태양궁전 광장에 화단 등을 만들어 공원을 조성하는 공사를 벌여왔으며 조선신보는 "지난 해 7월 말부터 1년 남짓한 사이에 공원 건설에 필요한 건설 자재와 꽃 관목, 수종이 좋은 나무들을 각지에서 보내왔다"고 전해 공사가 약 1년 전 시작됐음을 시사함.
- 北 "폭우로 사망 2명·이재민 760명 발생"(7/12,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2일 북한의 중부지역에서 큰물(홍수) 피해가 발생했으며 "초보적인 자료에 의하면 지난 9일 14시부터 11일 18시 사이에 내린 폭우로 2명이 사망했다"고 전함.
 - 통신은 폭우에 따른 주택 파손 및 침수 피해는 강원도 120채, 황해북도 19채, 평안남도 15채로 파악됐고 집을 잃은 주민은 760여명이며 함경남도, 황해북도, 강원도에서는 농경지 1천720여 정보가 물에 잠겼다고 밝힘.
- 北 "김정은, 최신과학도서 열독"...주민에 학습열 독려(7/13,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이날 1면에 게재한 '전당과 온 사회에 혁명적인 학습기풍을 세우자'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김 제1위원장이 당·정·군의 전반사업을



지도하는 바쁜 와중에도 김일성·김정일 '노작'(논문)과 함께 "세계적인 최신 과학기술자료들, 다방면적인 상식들까지 깊이 파고들고 있다"고 주장함.

- 신문은 또한 김 제1위원장이 독서를 통해 "인민군대의 싸움준비 완성과 관련한 새로운 명안과 전술적 방안도 제시하고 모든 것을 세계적 견지에서 보면서 최첨단 돌파의 지름길을 밝혀줘 모든 분야에서 획기적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고 밝힘.

● 北, 보양식 소개...최고 인기음식은 보신탕(7/13,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3일 '조선의 삼복철과 보양음식'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삼복 철에 들어선 요즘 식당들에서는 더위를 막는데 좋은 보양 음식들이 손님들의 구미를 돋우고 있다"며 보양음식의 우수성을 상세히 소개함.
- 통신은 삼복에는 낮 기온이 높고 대기가 습한데다 열대야까지 겹쳐 인체의 건강과 활동에 비정상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열치열의 고려의학(한의학)적 치료원리와 영양학적 원리에 따라 더운 음식을 먹는다"고 설명하면서 더위를 피하기 위한 대표적인 보양 음식으로 단고기장(보신탕), 닭탕, 파국, 쇠고기 매운탕, 팔죽, 어죽, 홍합죽, 비빔밥, 뱀장어구이 등을 제시함.

■ 기타 (대내 사회·문화)

- 장마전선 영향으로 9일 18시~10일 12시 사이에 평양 140mm 등(평안남도 회창군 157mm·평양시 상원군 149mm) 30여 지역에 100mm 이상 폭우(7.10,중통)
- 제27차 세계 대학생체육경기대회(러시아) 10일 경기성적 보도(7.11, 중통·평방)
 - 홍은정(女)선수, 체조 조마(도마, 뒀들)에서 금메달 획득 및 여자배구 조 1위

2. 대외관계

가. 일반

● 아베정권 '일본인 납치문제 진전없다' 결론(7/8, 아사히신문)

- 일본의 아베 정권은 지난 5월 이치마 이사오(飯島勳) 내각관방 참여의 방북에도 불구하고 일본인 납치 피해자 문제에 구체적인 진전은 없었다고 결론짓고 북·일 정부간 협의를 다시 모색키로 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8일 보도함.
- 일본정부는 이치마씨 귀국후 회담기록을 상세히 분석한 결과 이치마씨 방북으로 3차 북·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 다시



북·일 정부간 협의를 모색키로 했으며 제재를 포함한 종래의 대북 정책도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라고 신문은 전함.

- **중국, 동해 북한 수역서 자국어선 철수 지시(7/8, 중국신문사)**
 - 중국 농업부는 지난달 28일 각 성(省)·시(市)에 긴급 통지문을 보내 올해 동해 북한 수역에서의 원양어업을 잠정 중단하도록 하면서 동해 북한 수역으로 출어한 자국 어선들에 철수를 지시했다고 중국신문사가 8일 보도함.
 - 농업부는 모든 중국 어선이 동해 북한 해역에서 조업해서는 안 되며 일선 어업 당국이 이런 내용을 선사와 선주에게 알려 어선들을 즉각 철수시키고 사후 관리를 잘 하도록 지시함.
- **유엔사무총장 스포츠보좌관 방북, 北이 요청(7/9, 자유아시아방송(RFA))**
 - 윌프리드 램케 유엔사무총장 스포츠 특별보좌관은 북한 당국의 요청에 따라 방북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유엔 부대변인을 인용해 9일 전함.
 - 에두아르드 델부이 유엔 부대변인은 RFA에 "램케 특별보좌관이 북한 당국의 요청으로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북한을 방문 중"이라며 램케 특별보좌관은 북한 고위 당국자와 여성·장애인 체육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힘.
- **日민방 "北, 병력 30만 줄여 경제부문 배치"(7/9, ANN)**
 - TV아사히 계열의 민영 방송사인 ANN은 북한군 관계자에게서 취재했다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가 지난달 10일자로 전체 병력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30만명을 줄이기로 한 명령을 인민무력부 총참모부에 내렸다고 9일 보도함.
 - ANN은 8월 말까지 장교 5만 명, 병사 25만 명 등 총 30만 명의 병력을 빼내 경제부문으로 이동시키라는 것이 최고사령부의 명령이었다고 밝힘.
- **중국, 북한에 김정일 밀랍인형 선물(7/10, 중국신문사)**
 -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가 9일 베이징에서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 밀랍인형 증정 의식'을 개최하고 북한 측에 밀랍인형을 전달했다고 중국신문사가 10일 보도함.
- **北 "美, 한반도 대화 분위기 못마땅해하는 세력"(7/10,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0일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보장을 위한 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란 제목의 개인필명 논설에서 "조선반도에서 긴장 격화의 순환고리를 끊어버리려는 공화국(북한)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대화와 협상의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라며 "이것을 못마땅해하는 세력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이라고 주장함.
 - 신문은 "미국이 조선의 핵억제력을 걸고 들며 그 때문에 세계평화가 위



협당하는 듯이 떠드는 것은 궤변"이라며 "세계평화에 대한 위협의 진짜 범인은 다름 아닌 미국"이라고 주장함.

- **북중우호조약 52주년…北, 양국 혈맹관계 강조(7/10, 민주조선)**
 - 민주조선은 10일 개인필명의 글에서 북중 우호조약을 "피로 맺어진 조 중친선을 영원히 공고 발전시켜나가려는 조선과 중국 인민의 드팀없는 신념과 의지의 발현"이라고 평가함.
 - 신문은 중국이 성장하는 것에 대해 북한이 "자기 일처럼 기뻐하면서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보내고 있다"며 북한의 노동당과 정부는 양국의 친선 협조 관계가 강화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함.
- **북한, '스노든 폭로' 사태 反美 선전전에 적극 활용(7/10,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방송은 10일 미국 중앙정보국(CIA) 출신의 에드워드 스노든이 NSA의 정보수집 활동을 폭로한 이후 "서방세계에서 일대 물의가 일어나고 불신과 대립의 파동이 휘몰아치고 있다"고 보도함.
 - 방송은 유럽연합(EU),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지도자들이 미국의 불법도청 의혹을 비판한 발언을 소개하면서 서방세계를 이루는 양대 축인 미국과 유럽의 관계가 삐걱대는 데 주목함.
- **케네스 배, 美고위급 방북으로는 석방안돼(7/10,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10일 '수감자 석방의 조건은 적대시 정책 포기'라는 제목의 글에서 "조선(북한) 측은 미국인에 의한 범죄가 연달아 발생하게 되는 원인은 (미국) 정부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 있다며 버락 오바마 정권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힘.
 - 신문은 "미국의 정부와 언론은 조선이 배준호 사건을 정치적 흥정물로 써먹으려 한다고 여론을 오도하고 있으나 조선 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종전과 다른 새로운 차원에서 문제를 세우고 있다"며 "정책 노선의 차원에서 진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함.
- **북한 주재 中대사 "북중관계 안정적 발전 위해 노력"(7/10, 조선중앙통신)**
 - 류홍차이(劉洪才) 북한 주재 중국대사는 평양 옥류관에서 북한 대외문화연락위원회와 북중친선협회가 북중우호협력원조조약 체결 52주년(7월 11일)에 즈음해 마련한 연회에서 "조선(북한)측과 친선적인 교류와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중조(북중)관계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이며 건전한 발전을 추동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함.
- **北, 평양 온실단지 건설 위해 中 투자자 모집(7/11, 자유아시아방송(RFA))**
 - RFA는 중국 랴오닝성 단둥시의 한 투자 관련 기구가 제시한 대북 온실 투자자 모집 공고문을 입수했다며 북한이 평양시에 태양열을 이용한 축



열벽 방식의 대규모 온실 단지를 건설하기 위해 중국인 합작 대상자를 찾고 있다고 11일 보도함.

- 투자형태는 합작 또는 합자 형식으로 중국 측이 온실 건설에 필요한 자재와 설비, 채소 종자와 복합비료, 유동자금 등을 제공하고 북한 측은 온실 부지와 건설 인력, 전력, 온실 운영 인원 등을 제공하는 방식이며 투자규모와 기한, 수익 분배 등은 협상을 거쳐 추후에 결정한다는 방침임.

● 국제구호단체, 北어린이 43만명 일본뇌염 예방접종(7/11, 연합뉴스)

- 국제구호단체인 독일카리타스가 이달 2일 북한 황해남도 지역의 2~4세, 9~16세 어린이 43만 명에게 일본뇌염 예방접종을 했다고 연합뉴스가 11일 보도함.
- 독일카리타스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4단계에 걸쳐 북한의 2~16세 어린이 가운데 지난 2009~2010년 예방접종을 마친 5~8세를 제외한 총 320만명에게 백신을 접종할 계획이라고 설명함.

● 북중우호조약 52주년...北 "친선강화에 노력"(7/11, 조선중앙통신)

- 류홍차이(劉洪才) 북한 주재 중국대사가 평양 고려호텔에서 우호조약 52주년을 축하하려고 마련한 연회에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북중친선협회 중앙위원장인 강하국 보건상 등 북한 고위층이 참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1일 보도함.
- 강 보건상은 이 자리에서 "김정은 원수님께서 위대한 대원수님들(김일성·김정일)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전통적인 조중친선의 강화발전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계시다"고 말했으며 류홍차이 대사는 "지난 52년간 두 나라는 조약의 정신에 맞게 서로 지지하고 협력함으로써 중조친선관계의 부단한 발전을 추동했다"고 평가함.

● FAO "10월 수확 전까지 北 280만 명에 식량원조해야"(7/12, 연합뉴스)

-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분기별로 발표하는 '곡물 작황과 식량 상황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올해 상반기 곡물 45만9천100t을 수입하고 국제사회에서 26만6천400t을 지원받아 총 72만6천t을 확보했다고 연합뉴스가 12일 보도함.
- FAO는 그러나 북한의 지난해 곡물 수확량이 개선되고, 올 상반기 수확량도 평균에 가까웠지만 고질적인 식량 부족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어 오는 10월 수확기 이전까지 약 280만명이 식량원조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힘.

● "북한산 무연탄 품질 저하"...中업계에 '주의보'(7/12, 연합뉴스)

- 북한의 주요 수출 품목 가운데 하나인 무연탄의 품질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 이를 수입하는 중국의 관련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12일 보도함.
- 중국 무역업계의 한 관계자는 "북한 측과 구매 계약을 체결할 때는 무연



탄의 품질을 결정하는 회분(불연성 광물질) 함량이 15~17%였는데 실제 중국 항구에 도착한 물량을 검사하면 회분 함량이 18~21% 달한다"면서 "이런 경우 북한 측에 요구해 값을 깎거나 그대로 반송하기도 한다"고 말함.

- **유럽의회 한반도대표단 15일 방북(7/13, 미국의소리(VOA))**
 - 유럽의회 한반도관계 대표단 소속 의원들이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과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13일 보도함.
 - 방송은 한반도관계 대표단 소속 의원들이 방북 기간 외무성과 보건성, 농업성 부상을 차례로 면담하고 북한군 고위급 인사와도 만날 것이며,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주최하는 만찬에 참석하고 개성과 판문점, 함흥 지역을 방문하며 18일에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관심 속에 개발이 한창인 강원도 원산도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힘.

- **美 CIA "북한 인구 7월 현재 2천472만 명"(7/13, 자유아시아방송(RFA))**
 - 미국 중앙정보국(CIA)은 7월 기준으로 현재 북한의 인구가 2천472만 407명이며 239개 국가 중 49위에 해당된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3일 보도함.

- **北인권법 통과 후 美입국 탈북난민 159명(7/13, 자유아시아방송(RFA))**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미 국무부 인구난민이주국이 이달 초 발표한 '난민입국보고서'를 인용해 2013 회계연도가 시작된 지난해 10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13명의 탈북자가 난민 지위를 받아 미국에 입국해, 북한인권법을 제정한 2004년 이후 난민으로 수용한 탈북자는 현재까지 모두 159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힘.



■ 기타 (대외 일반)

- 駐유엔 北 상임대표의 '유엔사 해체' 발언(6.21)을 거론 '구성실태 및 운영상황을 고려한 정당한 요구'라며 미국에게 지속적으로 '정당한 요구에 응할 것'을 주장(7.8, 중통·민주조선)
- 美 당국의 北-美 대화를 위한 전제조건 발언(北, 비핵화를 위한 사전 조치·진정성 있는 대화) 관련 '우리(北)의 평화보장을 위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기 위한 여론전이며, 제2의 조선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사전준비 책동'이라고 비난(7.9, 중통·노동신문)
- 日 방위성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사거리 500km) 개발에 대해 "조선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에 대한 재침전쟁 도발을 기도하고 있다"며 "군사대국화와 해외침략의 길은 곧 일본의 종국적 파멸"이라고 주장(7.9, 중통·민주조선)
- 제네바 유엔사무국 駐在 北 상임대표(서세평), 7.10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의 '駐韓 유엔군 사령부 해체' 요구 및 '미국이 對北 제재압박을 강화할수록 자위적 핵무장력 더욱더 보강해 나갈 것' 천명(7.13, 중통·중방)
- '美 하원, 한반도 평화·통일 기원 결의안 발의' 내용(평화통일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北 핵무기 등) 관련 '분열의 장본인이며 통일의 방해자인 미국이 조선반도 분열의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한 궤변'이라며 재차 '미군철수' 주장(7.14, 중통·노동신문·평방)

나. 6자회담(북핵)

● 北, 南 북핵 국제공조 노력은 "반민족 대결망동" 비난(7/11,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1일 논평에서 ARF 외교장관회의 기간 윤 장관의 행보를 거론하며 "민족의 자위적 억제력 문제를 국제무대에까지 들고나가 추태를 부리는 것은 외세의존과 사대 매국이 체질화된 자들의 반민족적 대결 망동"이라고 비난함.
- 통신은 남한이 미국의 대북 제재와 '북침 핵전쟁 도발 책동'을 추종하고 있다며 "(남한과 미국이) 전쟁 도발의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면서 우리를 핵으로 엄중히 위협하고 있는 조건에서 우리가 핵을 포기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청산 없이 그 누구도 민족의 생명이고 재보인 우리의 핵보유에 대해 이러쿵저러쿵할 수 없다"고 덧붙임.

■ 기타 (6자회담(북핵))

- 김계관(외무성 제1부상), 7.9 러시아 국가회의 국제문제위원회 위원장(알렉세이 푸슈코프)과 면담 후 평양 도착(7.9, 중통·중방)



3. 대남동향

가. 정치·군사

- **北, SOFA 체결일 맞아 "불평등 예측관계 청산돼야"(7/9,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9일 '불평등한 예측관계는 청산돼야 한다'란 제목의 글에서 "1966년 7월 9일에 체결된 남조선-미국 행정협정은 미군의 남조선 강점을 합법화하고 미군의 전횡과 범죄를 묵인하는 현대판 노예문서"라고 주장함.
 - 신문은 "이 불평등한 협정을 코에 걸고 지난 47년간 미군은 남조선에서 폭행과 강탈, 살인과 강간 등 흉악 범죄를 일삼으며 실질적인 지배자로, 치외법권적 존재로 군림해왔다"고 비난함.
 - 또한 남한 당국이 SOFA를 철폐하는 대신 한미동맹 60주년을 기념하는 등 "친미사대적이며 굴욕적인 외세의존정책에 더욱 매달리고 있다"고 비난하며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해치는 SOFA는 당장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함.

- **北, 금강산관광 재개·이산가족 상봉 회담 제의(7/10, 연합뉴스)**
 - 북한이 판문점 연락관 채널을 통해 금강산 관광 재개회담을 오는 17일, 추석을 앞두고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실무회담은 19일 개최할 것을 제의하면서 두 실무회담의 장소로 금강산 또는 개성을 제안했다고 연합뉴스가 10일 보도함.
 - 우리 정부는 내부 검토를 거쳐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위한 19일 적십자 실무접촉은 수용하되 장소는 판문점 '평화의 집'으로 하자고 북측에 수정제의했다으나 금강산 관광재개 회담 제의에 대해서는 "남북 당국간 개성공단 회담이 진행되는 현 상황에서는 개성공단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현 시점에서 회담 개최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힘.

- **이산상봉·금강산관광 회담 모두 보류(7/11, 연합뉴스)**
 -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이 오늘 오후 6시께 전통문을 통해 2개 회담 모두를 보류한다고 우리측에 통보해 왔다"면서 "(보류 이유는) 개성공단 문제 해결에 집중하기 위함이라고 (이유를) 알려왔다"고 전했다고 연합뉴스가 11일 보도함.

- **北 "국정원, 남북관계 저해하는 암적 존재" 비난(7/13,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3일 논평에서 "신성시돼야 할 북남 정상 대화록이 정보원(국정원)과 같은 모략기관에 의해 당리당략의 도구로 악용되는 것은 경악할 일"이라며 "우리의 최고 존엄을 모독하는 특대형 모략사건을 시도한 장본인도, 반공화국 뼈라 살포와 공화국 주민 유인납치에 광분하는 것도 정보원"이라고 주장함.
 - 논평은 남재준 국정원장의 실명을 거론, "동족대결에 이골이 난 자"라고



비난하면서 "현 남조선 집권자가 남재준을 정보기관의 수장으로 앉힌 것은 동족대결의 수위를 높이려는 것이고 이번 대화록 공개도 그 연장선에서 연출됐다"고 지적하고 국정원이 존재하는 한 남북관계 개선을 기대할 수 없다며 "남조선 당국은 대화록 공개의 죄악을 민족 앞에 사죄하고 정보원을 당장 해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함.

● **北, 회담 보류 전통문 공개...남북관계 속내 '노출'(7/13, 조선중앙통신)**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3일 북측이 이틀 전 우리 측에 보낸 금강산관광 재개 실무회담 및 이산가족 상봉 적십자 실무회담 관련 전통문 전문을 뒤늦게 공개함.
- 북한은 이 전통문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와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실무 회담을 제안한 것이 "북남 사이에 제기되는 가장 절박한 문제들을 풀어나가려는 일념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밝히면서 남측이 "북남 적십자 실무접촉에는 동의하면서도 금강산 관광 재개와 관련한 실무회담에 대해서는 개성공업지구문제가 핵심사안이고 그의 우선적 협의해결에 노력을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면서 답변을 회피했다"며 "이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라고 지적함.
- 또한 두 회담을 모두 보류한 이유에 대해 "이번에 제기한 회담과 접촉문제들은 개성공업지구 회담에 달려있다고 본다"라며 "개성공업지구문제는 말그대로 현 북남관계의 시금석"이라고 강조함.

나. 경제·사회문화

● **'공단 정상화' 이견...南 재발방지 후 vs 北 조속히(7/10, 연합뉴스)**

- 남북 양측이 10일 개성공단에서 가동중단 상태인 공단의 정상화를 위해 또다시 마주앉았지만 합의 없이 끝났으며 오는 15일 회담을 다시 개최키로 했다고 연합뉴스가 10일 보도함.
- 북측 수석대표인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은 "개성공단의 설비 점검 및 정비를 조속히 끝내고 재가동에 들어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남측 수석대표인 서호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은 "무엇보다 개성공단은 안전한 공단이 돼야 하며 자유로운 기업활동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재발방지확약을 강조해 양측 간에 이견을 보임.



■ 기타 (대남)

- 우리 외교부 장관(ARF기간 한·미·일 회담)과 외교안보수석(고위급 안보회의, 러시아의 '북핵 외교'에 대해 "뺏속까지 외세의존과 사대매국 의식이 들어찬 자들의 반민족적 망동"이라고 지속 비난(7.9,중통·민주조선)
- 개성공단 '제2차 남북 당국 실무회담' 7.10 진행(개성공단 종합지원 센터), '남측의 무성의한 입장과 태도로 아무런 성과 없이 종료' 주장 및 '7월15일 제3차 실무회담을 갖기로 했다'고 신속 보도(7.10, 중통·평방)
- 「중통 논평」 통일부 대변인의 '北, 朴대통령 실명 거론 비난(7.1, 「조평통」 대변인) 관련 '매우 유감' 표명 등 브리핑에 대해 '북남 관계 악화 책임을 모면해 보려는 꾀변' 등으로 再비난(7.10,중통)
- [중통社 논평]국정원 대선개입 및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관련 '남측의 정치는 인민대중의 자주적 권리를 말살하고 이익을 침해하는 대가로 보수패당을 비롯한 소수특권층의 무제한한 권력과 치부를 보장하는 반인민적·파쇼정치'라고 비난(7.11,중통)
- 대통령 訪中 발언('새로운 남북관계',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변화' 등) 관련 '외세의 힘을 빌어 체제통일 야망을 실현해 보겠다는 것을 내외에 선포한 것'이라고 비난(7.11,평방)
- 「중통 논평」 국정원의 지난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지속 거론 비난 및 "괴뢰정보원은 모략의 소굴, 동족대결의 본거지"라고 '국정원 해체' 선동(7.13,중통)
- '韓·美, 워싱턴서 주한미군 방위비분담 협상' 진행 관련 '주한미군을 유지하기 위해 거액의 자금을 지출할 것을 강요하는 것은 날강도의 횡포'라며 '친미사대매국노들의 추악한 민족반역행위의 필연적 산물'이라고 비난(7.14,평방)

● 북한연구센터 제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미 38노스 "북한 3-4월에 로켓 엔진 실험">(7/11, 연합뉴스)
 - 미국의 북한 전문 인터넷 웹사이트인 '38노스'는 "북한이 올해 3월 말~4월 초에 평안북도에 있는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로켓 엔진을 시험한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위성사진을 공개했음.
 - 38노스는 "시험한 엔진의 종류와 횟수는 분명치 않지만 2008년 이후 이 시설이 은하 로켓의 시험장소로 사용된 점을 고려할 때 우주발사체(SVL)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음.
 - 또 "이 시험이 좀 더 무거운 위성을 궤도에 진입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은하 9호(대포동 3호)를 개발하려는 노력의 일부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 그러면서 38노스는 올해 3월 4일과 29일 그리고 5월 16일에 촬영된 위성발사장 내 로켓엔진 시험대의 모습을 근거로 제시했음.
 - 사진에서 3월 4일 촬영한 사진에는 별다른 활동이 보이지 않지만 같은 달 29일 사진에서는 연료탱크로 추정되는 물체와 크레인이 보임.
 - 이어 같은 장소를 촬영한 5월 16일 사진에는 시험대에 있던 물체가 모두 제거됐고 참호 일대가 다소 희미한 주황색으로 바뀌어 있음. 또 근처 수풀이 경계를 살짝 벗어나 제거된 듯한 모습을 보임.
 - 38노스는 이를 로켓 엔진 시험을 한 결과 근처에 있는 수풀이 불에 탄 것으로 해석했음.
 - 38노스는 유엔의 제재와 중국의 불쾌감 표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북한이 우주발사체와 장거리 미사일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고 지적했음.
- <북한 제네바 대사 "어떤 식의 대화에도 나설 것">(7/11, 미국의소리)
 -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대화를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고 거듭 밝혔음.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주장도 되풀이했음.
 - 서세평 제네바 주재 북한대사는 10일 제네바 주재 북한 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반도 긴장 완화와 안보 사안 등 어떤 종류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대화할 용의가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 그러면서도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끝내지 않는 한 북한은 핵억지력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주장했음.
 - 서 대사는 또 다음 달 예정된 미-한 합동군사훈련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미국이 한반도에서 긴장을 고조하고, 군



사력을 위해 유엔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며 한국 주둔 유엔군 사령부의 해체를 요구했음.

- 미국이 이 문제와 관련해 '대담한 결정'을 한다면, 북한도 신뢰 구축 조치를 지지하는 방향으로 나가겠다는 것임.
- 서 대사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경제 개발을 최우선하면서 인민의 생계와 삶의 질 향상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음.
- 서 대사의 이날 발언은 신선희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지난달 주장한 입장과 거의 일치함.
- 앞서 신 대사는 지난달 21일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유엔군사령부의 해체를 바란다며 미국의 위협이 지속되는 한 핵개발을 포기할 수 없다고 주장한바 있음.

나. 미·북 관계

● <파월 "대북억지력, 美재래식 무기로 충분">(7/10, 연합뉴스)

- 콜린 파월 전 미국 국무장관이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의 재래식 전력만으로도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아사히신문 인터넷판에 따르면 파월 전 장관은 10일 실린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억지책에 언급, "(미국의) 재래식 무력이 강력하기 때문에 핵무기를 사용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며 "만약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려하는 것으로 보일 경우 미국은 곧바로 북한의 체제를 파괴할 것"이라고 말했음.
- 합참의장을 거쳐 조지 W. 부시 행정부 제1기 국무장관(2001~2004년)을 지낸 파월은 인터뷰에서 핵무기가 극도로 잔인한 무기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지도자라면 그것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그 때문에 핵무기는 군사적으로 무용한 존재라고 주장했다.
- 그는 "정치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북한은 핵에 의존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사용하지 않는 무기인 핵을 가지는 것은 그들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살행위"라고 강조했다.
- 파월은 또 국무장관 시절인 2002년 핵무장국인 파키스탄과 인도가 카슈미르 문제로 일촉즉발의 대치를 하고 있을 때 자신이 세계 유일의 핵무기 피해국가인 일본의 비극을 거론하며 극단적 상황을 피하도록 유도했다고 술회했음.
- 그는 당시 자신이 파키스탄 총리에게 전화해 "당신이나 나나 핵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다"며 "1945년 8월 이후 처음으로 이 무기를 사용하는 나라가 될 셈인가. 피폭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비참한 사진을 떠올려보라"고 압박했다고 소개했음.
- 그에 대해 파키스탄 측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밝혔고, 그 후 인도도 같은 반응을 보였다고 파월은 전했다.



- <미 태평양사령관 "북한 핵미사일 능력 검증안돼">(7/12, 연합뉴스)
 - 새뮤얼 라클리어 미국 태평양군(PACOM) 사령관은 11일(현지시간) 북한의 핵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능력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 라클리어 사령관은 이날 펜타곤(국방부 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중거리 탄도미사일 '무수단과 이동식 ICBM으로 알려진 'KN-08' 등을 언급한 뒤 "북한은 진짜인 것처럼 보이는 여러 급의 미사일을 보여줬지만 우리는 이들 미사일의 능력을 입증하는 믿을만한 증거를 보지는 못했다"고 지적했다.
 - 그는 특히 지난해 12월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가 성공했다면서도 그들이 탄도미사일을 궤도에 올려놓는 기술을 확보했는지, 핵프로그램을 성공시켰는지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북한은 이른바 도발 전략이나 도발사이클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 그는 "북한은 한국이나 역내 국가, 미국 등을 상대로 도발을 감행하고, 위협을 고조시켜 다른 국가들이 이에 대해 논의하게 한 뒤 다시 대화를 시도한다"면서 "대화를 통해 이들은 권력을 유지하려 하는 동시에 타협의 성과를 이끌어 내려 한다"고 설명했다.
 - 그러면서 "이런 사이클은 계속되고 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바뀐 것은 그들이 핵능력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 그는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말할 수 없지만 역사를 돌아보면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서 "따라서 이번에 북한과의 광범위한 협상을 진행한다면 검증가능한 비핵화가 기본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라클리어 사령관은 최근 들어 북한의 도발이 소강상태를 보이는 데 대해서도 "전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뒤 최근 조용해졌지만 북한의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 <미국 하원, 북한 '돈줄 옥죄는' 법안 처리 가속도>(7/14, 연합뉴스)
 - 미국 하원이 북한의 돈줄을 단단히 죄는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음.
 - 이 법안에 찬성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하원의원이 100명에 육박하고 있어 이르면 여름 휴회 이전에 문안 조정 작업을 거쳐 가을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
 - 14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의회 소식통에 따르면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이 지난 4월 말 발의한 '북한 제재 강화 법안(H.R.1771)'에 공동 발의한 의원은 이날 현재 전체 435명 가운데 95명에 달함.
 - 또 한국전쟁 발발 63년 및 정전 60주년 등 한반도 관련 행사가 이어지면서 소속 당을 막론하고 이 법안을 지지하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어 하원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게 의회 안팎의 관측임.
 - 법안은 북한이 핵 및 미사일 개발에 투입하는 달러화 등 경화 확보를 어렵게 하려는 의도로,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이나 은행, 정부 등이 미국



- 을 상대로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임.
- '이란 제재법'을 본떠 북한과 불법 거래하는 제3자나 제3국도 미국 법에 따른 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이 적용됐다는 점에서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 법안으로 평가됨.
- 이 법안은 미국 재무부가 2005년 취했던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 계좌 동결 조치와 유사한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음.
- 북한도 이 법안이 발의될 당시 강력한 비난 성명을 낸 바 있음.
- 한 소식통은 "법안이 하원에서는 일단 무난하게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법안이 통과하면 중국 기업들이 주요 타깃이 될 것이 뻔해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약간 꺾그러워 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 로이스 위원장 측은 가능한 한여름 휴회 이전에 축조 심의(문안 조정 작업)를 끝내고 나서 의회가 다시 문을 여는 대로 본회의에서 법안을 가결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 중·북 관계

● <북중우호조약 52주년...北 "친선강화에 노력">(7/11, 연합뉴스)

- 북한은 북·중 우호조약이 체결된 지 52주년을 맞은 11일 중국과 친선관계를 부각하는 데 주력했음.
- 류흥차이 북한 주재 중국대사가 이날 평양 고려호텔에서 우호조약 52주년을 축하하려고 마련한 연회에는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북중친선협회 중앙위원장인 강하국 보건상 등 북한 고위층이 참석했음.
- 강 보건상은 이 자리에서 "김정은 원수님께서 위대한 대원수님들(김일성·김정일)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전통적인 조중친선의 강화발전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계시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 그는 또 북·중간 친선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류흥차이 대사는 "지난 52년간 두 나라는 조약의 정신에 맞게 서로 지지하고 협력함으로써 중조친선관계의 부단한 발전을 추동했다"고 평가했음.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기념논설에서 최룡해 특사의 방중 등 북·중간의 교류와 협력을 언급하면서 "이것은 50여 년 전에 체결된 조중우호, 협조 및 호상 원조에 관한 조약의 정신이 새 세기에 들어와서도 고수·구현되고 있다는 것을 확증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 신문은 이어 "우리 당과 인민은 앞으로도 조중 두 나라 노세대 영도자들께서 마련하고 꽃피워주시는 전통적인 조중친선을 보다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또 조선중앙TV는 이날 김일성 주석이 생전에 마오쩌둥 전 국가주석, 저우언라이 등 중국 지도부와 친분을 과시한 기록영화를 내보냈음.



- 평양방송과 조선중앙방송 등 라디오 매체도 북중우호조약 52주년을 맞아 중국 인민에게 친선의 인사를 보낸다는 내용을 여러 차례 방송했음.

● <중국, 북한에 유류공급 재개>(7/12,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중단되었던 북한에 대한 중국의 유류공급이 최근 재개된 것으로 알려졌다.
- 중국은 북한의 3차 핵실험 직후 단둥 외곽지역에서 파이프라인을 통해 북한에 보내던 유류공급을 중단한바 있음. 당시 중국의 대북 관측통들은 유류공급 차단이 북한에 대한 중국의 압박조치의 하나라고 분석
- 북-중 관계에 정통한 중국의 한 대북소식통은 최근 중국당국이 파이프라인을 통해 유류 완제품을 북한에 다시 보내기 시작했다고 밝혔음.
- 이 소식통은 "보내주는 유류의 양이 핵실험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되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으나 송유관을 통해 기름을 다시 보내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음.
- 이와 관련 단둥에서 유류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한 무역업자도 "얼마 전부터 파이프라인을 통해 북한에 기름을 다시 보내고 있다"고 확인했음.
- 중국이 북한에 송유관을 통해 보내던 기름을 중단한 것은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 이후인 지난 3월부터였음. 그로부터 3개월가량 중단되었던 유류 지원이 이번에 재개된 것임.
- 한편, 중국 단둥의 한 무역업자는 "최근 들어 북한에 들어가는 물품에 대한 세관검사도 전보다 조금 수월해진 것 같다"면서 "핵실험 이전의 화물 검사 수준과 비슷하게 완화되었다"고 전했다.
- 또 다른 단둥의 무역업자는 "요즘에는 북한 대방으로부터 주문 물량이 대폭 줄어드는 바람에 장사가 안 되는 것이지 통관문제 때문에 장사를 못하는 경우는 없다"고 강조
- 중국당국이 반출을 금지한 쌀을 사과상자에 담아 위장해서 보내는 것이나 사과, 바나나 등 수입과일도 형식적인 서류 검역만으로 간단히 통관시켜 주고 있다는 얘기임.
- 중국 변경지역의 대북 무역업자들은 "중국의 권고를 무시하고 핵실험을 강행한 김정은 정권에 대한 길들이기 차원에서 시작된 대북 압박조치가 조금씩 완화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했음.

라. 일·북 관계

● <일본 해안서 발견된 북한시신서 김정일부자 초상화>(7/9, 연합뉴스)

- 올 들어 동해 쪽 일본 해안에서 잇달아 발견된 북한 선원 시신 대부분에서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초상화가 발견됐다고 아사히신문이 9일 보도했음.
- 일본 경찰이 지난 2월~5월 니가타, 아키타 현 등의 해안에서 발견된 북한 화물선 선원 시신 6구를 조사한 결과, 화물선 조난 때 필사적으로 갖고 나온 것으로 보이는 김일성 부자 초상화가 발견됐음.



- 대부분의 시신에서 나온 빨간 통 안에 비닐로 공들여 싸 김일성 부자 초상화가 거의 훼손되지 않은 채로 들어있었다는 것임.
- 이들 시신은 작년 12월 북한 북동부 동해상에서 조난했던 북한 화물선 대각봉(6천587톤) 선원으로 추정되고 있음.
- 당시 대각봉은 조난 신호를 수신한 러시아 측의 구조 제의를 물리치고 선원 24명이 구명보트로 옮겨졌으나 그 후 행방불명됐음.
- 북한에서는 각 가정과 공공기관 등에 김일성 부자 초상화를 게시, 재해 시에 초상화를 갖고 나오지 않으면 강제 수용소로 보내지는 등 처벌을 받는 반면 목숨을 걸고 초상화를 지키면 미담으로 칭찬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북한 선원 시신에서 초상화가 발견된 것도 자신과 가족들이 처벌받을 것을 우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전했다.
- 이들 시신은 북한측이 화물선 조난 사고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없어 유족들에게 인도되지 못한 채로 있음.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국정원, 美에 탈북자 9천여명 정보넘겨”<위키리크스>>(7/13, 연합뉴스)
 - 국가정보원이 9천여명의 탈북자 관련 정보를 미국 정부에 넘겼다는 의혹이 제기됐음.
 - 주한 미 대사관이 국무부에 보낸 지난 2007년 7월9일자 외교전문에 따르면 미 정부는 거의 공개되지 않은 북한 관련 정보를 방대하게 갖고 있고, (이들 정보) 파일에는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 9천180명의 정보가 담겼음.
 - 이 외교전문 내용은 폭로 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가 웹페이지에 공개한 것임.
 - 이들 정보 파일은 특히 국가정보원(NIS) 및 한국의 관계기관들이 수집한 것으로, 미국 국방정보국(DIA) 한국지부에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넘겨졌음. 또 파일 기록이 담긴 기간은 1997년부터 2007년 미국으로 넘겨진 시점까지로 파악됐음.
 - 이들 정보 가운데 탈북자들의 직접 증언 내용은 북한 정권의 안정성 여부 평가, 붕괴 또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계획 수립, 인권침해 기록 구축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평가됐음.
 - 주한 미 대사관은 탈북자 정보 가운데 네 가지 파일 내용을 무작위로 골라 △평양과 청진에서 성경·전자제품 등의 유통 △중국에서 돌아온 북한 임신 여성에 대한 낙태 유도 △미화 26달러에 중국 농촌으로 팔려가는 인신매매 실태를 언급했음.
 - 여기에는 중국에서 붙잡힌 북한 주민들의 전기고문, 2002년 경제 개혁



조치에 대한 북한 노동자들의 불만, 라디오 방송 청취를 통한 한국사회 지식 획득 같은 사실들도 포함됐음.

- 대사관은 이 정보들을 과거 미국 정부가 알카에다 관련 자료를 만드는 데 사용한 '하모니 데이터베이스'처럼 DB화하기를 바란다며 예산 등에 관한 본국의 판단을 요청했음.
- 국정원은 이번 의혹과 관련해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국정원에서 (정보를) 넘겼다는 것 자체가 확인할 수 없는 얘기"라고 밝혔음.

나. 한·중 관계

● <윤병세 "한중, 터부시했던 통일문제 격의없이 얘기">(7/11, 연합뉴스)

-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1일 "(한중 정상회담 과정에서) 우리가 의심하기 힘들 정도로 (중국이 북한 비핵화에 대해) 단호하고 확실한 표현을 썼다"고 밝혔음.
- 윤 장관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 한중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북핵 문제와 관련해 "중국 지도자들이 여러 가지 표현으로 북한 비핵화에 대해 확실히 의지를 표명했다"면서 이같이 말했음.
- 윤 장관은 "한반도 비핵화냐 북한 비핵화냐는 것에 관심이 많은데 정상회담(공동성명)에도 표현은 한반도 비핵화지만 이 지역에서 핵무장 하는 국가는 북한밖에 없기 때문에 (한반도 비핵화가) 북한 비핵화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 그는 "한미, 한중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한·미·중 3국 정상간 북핵 불용과 북한 비핵화 원칙에 대해 재확인했다"면서 "3국 정부간 큰 틀에서 대북공조 체제를 구축했고 나아가 5자간 공조 체제도 강화됐다"고 말했음.
- 그는 "5월 이후 북한이 보여주는 태도, 일련의 대화제외가 이런 국제사회의 공조와 무관하지 않다"면서 "대화 공세가 그냥 나왔다고 생각하지는 않으며 이런 것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분석했음.
- 특히 윤 장관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중요한 것은 회담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한반도의 미래 문제, 통일 문제를 논의한 것"이라면서 "아주 격의없이 얘기했다. 그동안 한중관계에서 통일문제는 아예 터부시됐었는데, 이번에는 중국 지도자들이 솔직하게 얘기했다"고 전했음.
-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으로 근무했던 윤 장관은 "제가 수석이기는 했지만 사실 최근(언론 공개전)까지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보지 못했다"면서 "대화록은 당시 (회담에) 갔다 오신 분 중 일부만 보신 것 같고 수석을 포함해 대부분 사람은 보지 못했다"고 소개했음.
- 윤 장관은 이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가 외교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우리 외교에 문제 있을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음.
- 그는 '정상회담 준비 당시에 NLL 포기 구상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지난 정부에 있다가 이번 정부에 온 분 중 저와 김관진 국방부 장관, 김장



수 안보실장이 외교안보 수장을 맡고 있다"면서 "국가관과 안보관이 모호하다면 이번 정부에서 일하지 않았을 것으로 그런 각도에서 보면 어떻게 준비했는지 알 것"이라고 답했음.

- 이밖에 그는 탈북자 문제와 관련, "자유와 보다 나은 삶을 찾아서 오는 탈북민이 안전하게 호송될 수 있도록 탈북루트를 아주 안전하고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과거 어느 때보다 탈북민 관련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음.

다. 한·일 관계

● <日외무차관 방한...정상회담 여건조성 포석>(7/11, 연합뉴스)

-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측근으로 통하는 일본 외무차관이 신임 인사 차 11일 방한했음.
- 사이키 이키타카(齋木昭隆) 신임 사무차관은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김 규현 외교 1차관을 만난 자리에서 "아베 내각도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 그는 "일본도 공통의 가치와 제도를 공유하는 한국과의 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사이키 차관의 방한은 한일 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여건조성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됨.
- 아베 총리 측근으로 통하는 그는 방한 기간 정상회담과 관련한 아베 총리의 메시지를 전달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관측됨.
- 그러나 아베 총리 자신이 도발성 발언을 계속하고 있어 당장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임.
- 사이키 차관은 2002년 관방 부(副)장관이던 아베 총리와 함께 일본인 납북 피해자 5명을 귀환시키는 작업을 주도했으며 이후 일본 외무성 내에서 아베 총리의 측근으로 통하고 있음.
- 김 1차관은 이날 면담에서 "우리 정부는 한일관계를 중시하고 있다"면서 "양국 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는 우선 일본측이 과거사 현안 해결에 성의있게 대응해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아베 총리는 박근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의욕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사이키 차관은 12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등을 예방한 뒤 귀국할 예정임.
- 이에 앞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날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 "오늘 합의했다가 다음날 깨지거나 하는 회담은 하지 않는 게 낫다"고 밝혔음.

● <한일, 정상회담 놓고 '기싸움'>(7/12, 연합뉴스)

- 한국과 일본이 양국 정권교체 이후 한 번도 열리지 못한 양자 정상회담



- 개최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음.
- 박근혜 대통령이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일본 정부도 정상회담 조기 개최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맞받았음.
-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12일 기자회견에서 "(한일정상끼리 논의해야할) 시급한 의제도 없다"며 "실무 담당자간의 의사소통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음.
- 박 대통령이 지난 10일 언론사 논설실장·해설위원실장 오찬에서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정상회담을 할 때는 두 나라 관계 발전에 더 좋은 쪽으로 가야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안 하니만 못한 결과가 되면 모두가 힘이 빠지는 일"이라고 언급한데 대한 직접적인 반응임.
- 앞서 스가 장관의 직속 상관인 아베 신조 총리는 지난달 26일 박 대통령과 "직접 만나 대화를 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음. 그럼에도 스가 장관이 '정상회담이 당장은 필요없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은 7·21 참의원 선거를 앞둔 지금 한일정상회담 조기 개최를 위해 자국민에게 '양보'로 비칠만한 행동에 나설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됨.
- 한국 정부는 정상회담이 열리려면 일본 정부의 올바른 역사인식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 스가 장관은 또 전날 서울에서 열린 한일 외무차관 회담에서 한국 측이 일본에 역사인식과 관련한 성의있는 대응을 요구한데 대해 "아베 내각의 역사인식에 대해 계속 이해를 구해 나가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라며 "솔직한 의견교환을 하면서 의사소통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음.

라. 미·중 관계

- <제5차 중미전략경제대화 개막, 왕양 부총리 참석>(7/11, 인민일보)
 - 7월 10일 제5차 중미전략경제대화가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되었음.
 - 왕양(汪洋) 부총리와 양제츠 국무위원이 시진핑 주석의 특별대표 신분으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특별대표인 존 케리 국무장관과 제이콥 루 재무장관과 함께 대화에 참석하였음. 또 바이든 미국 부통령이 개막식에서 축하 연설을 하였음.
 - 왕양 부총리는 "이번 대화는 이전 대화의 성과를 계승하고 미래를 개척하고 있고 충돌이나 대항하지 않고 상호 존중, 상호 윈윈이라는 새로운 대국관계 이념을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음.
 - 또한, 왕양 부총리는 "양국 경제관계의 빠른 발전 과정 중 나타나는 문제와 마찰에 대해서 쌍방은 대화를 통해 이견을 좁히고 경제문제의 정치화, 특정문제의 확대화를 추구하지 않으며 일회적 일로 중미관계의 안정적 발전 기초를 흔들어서는 안된다"며 "중미 양국의 순조로운 협력은 세계 평화와 안정의 기초가 되며 세계 번영 발전의 엔진이 된다. 양국이 함께 노력하여 태평양을 뛰어넘는 새 협력의 장을 열어나가자"라고 밝혔음.



- 바이든 부통령은 축사에서 "미중 양국은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국이며 미중관계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양자간 관계이다. 양국 경제의 지속적 발전 추진과 각종의 세계적 도전에 대처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세계의 평화, 안정, 번영을 위해서는 양국의 협력이 필요하다. 미국 측은 중국의 발전을 환영하고 중국의 개혁 개방이 미국과 세계 모두에게 유익하다고 믿는다. 미중 사이에는 경쟁과 협력이 존재하지만 양국 관계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 양국은 거시적인 전략과 건설적인 태도로 미중 관계의 발전을 도모하고 깊이있는 대화와 상호신뢰 증진, 협력 강화, 이견 통제, 좋은 효과를 일으키는 경쟁을 하여야 한다. 중미 전략경제대화는 양국 모두에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 <“중국, 가장 적극적인 미사일 개발국”<미국 보고서>>(7/11, 연합뉴스)
 - 중국군이 세계에서 가장 적극적이고 다양한 탄도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는 미국 국방부 산하 정보기관 보고서가 나왔음.
 - 11일 국방부 산하 국립항공우주정보센터(NASIC)의 '탄도·순항 미사일 위협 보고서' 최신판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 미군에 더 비중을 두는 정책을 추구하자 중국은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확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 보고서는 또 중국이 보유한 탄도미사일에는 중국 해안에 있는 잠수함에서 미국 일부 지역을 목표로 발사할 수 있는 JL-2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 또 중국은 공격미사일 개선 실험과 탄도미사일 방어체계 대응 방안 개선 작업 등을 하고 있으며 15년 이내에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중국의 핵탄두 수가 100개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했음.
 -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관련해서는 최근 북한이 차량으로 이동 가능한 '화성 13호' 대륙간탄도탄(ICBM)을 공개했으며 ICBM으로 개발되면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대포동 2호' 개발도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최대 사거리가 5천500km 이상인 화성 13호와 대포동 2호 외에도 북한은 많은 단거리 미사일을 보유하고 중거리 미사일도 개발중이라고 보고서는 전했다.
 - 보고서는 "대포동 2호 및 새로 공개된 ICBM의 개발 노력에서 북한이 장거리 탄도 미사일과 우주발사 능력을 가지려 함을 알 수 있다"며 "북한은 탄도 미사일 시스템을 수출해 왔고 아마도 계속 수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보고서는 또한 이란은 2015년까지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ICBM을 개발해 실험할 수 있다고 분석했음.
- <美·中 '한반도 비핵화' 재확인...투자협정 협상 재개>(7/12, 연합뉴스)
 - 미국과 중국은 11일(현지시간) 이틀간 워싱턴DC에서 진행된 제5차 전략경제대화를 마치며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했음. 또 양국 간 투자협정(BIT) 체결을 위한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



- 하지만 양국은 해킹을 비롯한 사이버 안보 문제로 첨예한 의견차를 드러냈으며, 특히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개인정보 비밀수집 사실을 폭로한 에드워드 스노든 문제를 놓고 갈등을 드러냈음.
 - 미국은 이틀간 진행된 이번 대화의 성과를 담은 성명에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관련, "의미있는 비핵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밝혔음.
 - 또 윌리엄 번스 국무부 부장관은 기자회견에서도 "이번 대화에서 북한 문제가 매우 중요한 이슈로 다뤄졌다"면서 북한과의 대화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검증 가능한 비핵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중국 측은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6자회담을 비롯한 대화의 조기 재개가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음.
 - 북한 핵문제에 대한 양국간 합의내용은 지난달 캘리포니아주 란초미라지에서 열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간 첫 정상회담의 합의를 재확인한 것임.
 - 중국 측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를 이행하겠다는 점도 재확인했다고 미국 측은 전했다.
 - 이와 함께 투자협정 체결 협상과 관련해 제이킵 루 미국 재무장관은 "중국과의 투자협정은 미국에 최우선 과제"라면서 "양국이 공정한 경쟁을 위해 시장을 개방함으로써 미국기업과 노동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분야를 확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중국 측도 신속한 협상 개시에 합의했다고 밝히면서 외국기업들의 투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상하이에 시범 자유무역지구를 설치할 방침을 밝혔다.
 - 양국 간 투자협정 체결 협상은 지난 2008년 시작됐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으며 최근에는 지지부진상태였음.
 - 양국은 그러나 사이버 안보와 관련해서는 첨예하게 맞섰음. 미국은 조직적인 사이버 해킹이 중국 정부의 비호하에 대대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사이버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를 강력히 제기했음.
 - 이에 대해 중국은 사이버 해킹과 관련해서는 "중국도 피해자"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미국 정보당국에 의한 비밀 정보수집 사건 등에 대해 해명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음.
 - 번스 부장관은 스노든이 홍콩으로 도피했을 당시 중국 정부가 그의 신병을 인도하지 않은데 대해 "매우 실망했다"고 말한 뒤 "이는 난제들을 다루기 위해 필요한 신뢰를 쌓으려는 우리의 노력을 저해한다"고 강조했다.
 - 이에 대해 중국의 양제츠 외교 담당 국무위원은 "중국 중앙정부는 홍콩 특별행정부 정부의 법에 따른 사안 처리를 항상 존중한다"면서 "스노든 문제는 법에 따라 처리했으며 이런 방식을 비난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 <스노든, 中 지도부 첩보파일 가졌나?...美 우려>(7/12, 연합뉴스)
- 전직 미국 중앙정보국(CIA) 요원이었던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수세에 몰린 미국 국토안보국(NSA)의 고민이 갈수록 깊어가고 있음.



- 스노든이 NSA 네트워크망에서 어떤 민감한 자료들을 빼냈는지를 도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임.
- 특히, 스노든이 중국 지도부 등과 관련된 첩보 파일을 빼내갔는지 여부는 NSA에 중대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미국 일간지인 워싱턴포스트(WP)는 11일(현지시간) 스노든 폭로사건의 피해를 평가한 NSA 내부 보고서가 특정 부분에 고민을 집중하고 있다며 스노든이 중국 지도부 등에 대한 스파이활동을 담은 파일에 접근했는지 여부라고 보도했음.
- 미국 정보당국은 중국 지도부 첩보같이 해외 첩보수집 대상에 관한 민감한 정보가 세상에 공개됐을 경우 향후 해외 첩보 활동 자체가 위태롭게 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음.
- 특히, 스노든 문건으로 인해 미국이 중국 네트워크망에 어떻게 잠입했는지가 낱알이 드러나면 미국에 상당한 타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이밖에 세계 주요 언론을 통해 '스노든 문건'을 토대로 한 폭로가 계속될 경우 정보당국의 첩보수집 방법이 드러날뿐만 아니라 첩보대상이 된 국가 등이 정보가 썰 만한 '구멍'을 알아챌 수 있다는 것임.
- 미국의 한 고위 정보당국자는 "심히 걱정된다"며 "좀 더 많이 공개될수록 (정보수집) 역량도 많이 잃게 된다"고 전했다.
- 실제 스노든이 어떤 민감한 정보를 취득했는지를 놓고서는 의견이 엇갈림.
- 그가 상당 분량의 기밀문서를 NSA에서 빼냈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반해 빼낸 정보의 양만 많지 않겠는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음.
- 미국 정보당국의 또 다른 걱정은 스노든이 빼낸 기밀 정보가 현재 스노든의 통제 하에 없거나 앞으로 스노든의 손아귀를 떠날 수 있다는 점임.
- 이럴 경우 미국 사법당국이 우여곡절 끝에 스노든을 붙잡아 그의 입을 틀어막더라도 미국 정보당국의 비밀 첩보 활동에 관한 '폭로'는 계속될 가능성이 큼.

마. 미·일 관계

- <“美·日, 10월 외무·국방장관회의 개최 검토”>(7/11, 연합뉴스)
 - 미국과 일본 정부는 양국 외교·국방장관이 참가하는 미·일 안전보장 협의위원회(2+2)를 오는 10월 개최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11일 보도했음.
 - 양국은 2+2 장관 회의에서 유사사태 발생시의 미군과 자위대 역할을 정한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 오키나와 미군 후텐마 비행장 이전 작업의 가속화 등을 논의할 예정임.
 - 앞서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과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일본 방위상은 지난 4월 워싱턴에서 회담했을 때 연내에 2+2 장관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음.
 - 아울러 두 나라는 오는 25일 도쿄에서 외교·국방 당국 차관보급 협의를 갖고 2+2 장관회의에 대한 사전 협의를 진행할 예정



- 이 회의에서 양측은 일본이 연내에 확정할 중장기 방위지침인 '방위계획 대강' 내용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함.

바. 미·러 관계

● <美 "스노든 문제 불구 오바마 방러 계획 차질없다">(7/9, 연합뉴스)

- 미국 정보당국의 개인정보 수집 활동을 폭로하고 러시아에 도피중인 에드워드 스노든 문제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방러 계획이 취소될 수도 있다는 언론 보도를 미국 정부가 직접 부인하고 나섰다.
-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에 따르면 마이클 맥폴 러시아 주재 미국 대사는 8일(현지시간) 관련 언론 보도가 나간 뒤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9월 오바마 대통령의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방문 준비에 바쁘다. 이 방문을 고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 오바마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 계획 취소 가능성을 부인한 것임. 뒤이어 버내딕 미헨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도 스노든 문제로 9월 초로 예정된 오바마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이 취소될 수 있다는 언론 보도는 잘못된 것이라고 발표했다.
- 미헨은 "이는 정확지 못한 보도이며 오바마 대통령은 9월에 러시아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오바마 대통령은 오는 9월 5~6일 러시아 제2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며 이에 앞서 같은 달 3~4일 모스크바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별도의 정상회담을 열 계획임.
- 뉴욕타임스(NYT)는 그러나 스노든이 모스크바 국제공항에 계속 머무는 한 오바마 대통령이 모스크바를 찾을 가능성이 작다고 보도했음.
- 이어 러시아 일간 '코메르산트'도 미국 국무부 관계자를 인용해 스노든이 9월 초까지 계속 모스크바 국제공항에 머물 경우 오바마 대통령이 러시아 방문 계획을 취소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 신문은 그러면서 미국이 이같은 의사를 외교 채널을 통해 이미 러시아 측에 통보했다고 소개했음. 이 같은 보도가 논란을 일으키자 미국 정부가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임.
- 지난 23일 홍콩에서 러시아로 피신한 스노든은 9일 현재 17일째 모스크바 세레메티예보 국제공항의 환승구역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 스노든 문제는 그러잖아도 복잡한 러-미 관계의 새로운 걸림돌이 되고 있음. 스노든 스스로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그의 러시아 망명 가능성은 거의 사라졌지만 러시아는 여전히 미국 정부의 요청에도 그를 미국 측에 넘겨주진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 <오바마-푸틴 통화...'스노든 러 망명 요청' 논의>(7/13, 연합뉴스)

- 미국 정보 당국의 개인정보 수집 활동을 폭로한 에드워드 스노든이 12일(현지시간) 러시아에 임시 망명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버락



-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날 저녁 전화 통화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음.
- 백악관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두 대통령은 미·러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언급했으며 스노든씨의 상황(status)을 포함한 안보 및 양국 현안과 소치 동계 올림픽 준비 과정에서의 대(對)테러리즘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백악관은 그러나 스노든과 관련한 자세한 대화 내용은 밝히지 않았음.
 - 러시아 이타르타스 통신도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공보실장의 말을 인용해 통화 사실을 보도
 - 페스코프 실장은 통신에 "미국 측의 요청으로 두 정상이 통화했으며 양국 협력 및 안보 현안에 대한 견해를 교환했다. 이와 별도로 스노든을 둘러싼 상황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 오바마 대통령이 스노든의 송환을 직접적으로 요청했는지, 푸틴 대통령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어떤 입장을 전달했는지 등은 즉각 알려지지 않고 있음.
 - 스노든이 지난달 말 홍콩을 떠나 모스크바에 도착한 이래 두 정상이 통화한 것은 처음임.
 - 한편, 스노든은 이날 모스크바 세레메티예보 국제공항에서 이뤄진 러시아 및 국제 인권기구 대표들과의 면담에서 라틴아메리카로 가기 전까지는 러시아에 임시 망명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 앞서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두 대통령 간 전화 통화는 미리 정해진 일정이며 스노든 문제도 대화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카니 대변인은 "그게 오늘 논의될 유일한 의제는 아니고 두 정상이 실제 전화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논의가 오갈지 예측하지도 않겠다"며 "다만, 푸틴 대통령은 스노든과 관련한 미국의 관점을 잘 알고 있고 양국 정부 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이 현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 그는 이어 "미국은 스노든이 러시아에서 추방돼 미국으로 보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는 기밀 정보 불법 공개와 연관된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 쟈 사키 국무부 대변인도 정례 브리핑에서 러시아가 스노든의 임시 망명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미·러 관계에 우려를 불러 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 사키 대변인은 그러면서 "우리는 아직 그 단계에 이르지 않았다. 러시아는 아직 올바른 일을 할 기회가 있고 스노든을 미국으로 송환할 수 있으며 그게 미국의 희망"이라고 부연했다.

사. 중·일 관계

- <중국 외교부 "아베 역사인식 발언 놀랍다">(7/8, 연합뉴스)
 - 역사 인식을 정상회담의 전제 조건으로 삼는 것은 옳지 않다는 아베 신



- 조 일본 총리의 발언을 중국이 정면으로 비판했음.
-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우리는 일본 지도자의 관련 언급에 놀라움을 느낀다"고 밝혔음.
 - 화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각국이 자기 역사에 자부심을 가진 만큼 서로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아베 총리의 최근 발언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물음에 "일본 군국주의의 침략과 식민통치는 아시아 이웃 나라에 심각한 상처를 줬다"며 이같이 말했음.
 - 화 대변인은 "일본이 역사를 대하는 정확한 태도는 소위 자부심 같은 것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침략 역사를 직시, 반성하고 역사 문제를 이웃 국가에 상처를 주거나 자극하는 도구로 삼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 아베 총리는 7일 후지TV에 출연, "(역사인식 문제를) 외교카드화해서 정상회담을 하느냐 마느냐의 조건으로 삼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 한국과 더불어 중국은 침략 역사를 부인해온 아베 총리의 잇따른 발언에 격렬히 반발해왔음.
 - 아베 총리는 취임 후 아직 한국, 중국과 정상회담을 하지 못했음. 아울러 화 대변인은 일본이 중국 위협론을 갖고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면서 일본이 진정으로 중국과 관계를 개선하고 싶다면 중국의 이미지에 먹칠하는 행동을 멈추고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음.
- <중국 국방부, 일본 방위백서 "사실 왜곡" 비난>(7/12, 연합뉴스)
- 중국 국방부는 11일 일본의 최근 방위백서가 사실을 왜곡하고 '중국 군사 위협론'을 과장하고 있다고 비난했음.
 - 중국 국방부는 이날 자체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글에서 "일본 정부가 9일 발표한 2013년 방위백서는 사실을 왜곡하고 '중국 군사위협론'을 크게 부풀리는 등 중국의 방위력 및 군대 건설에 대해 잘못된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밝혔음.
 - 국방부는 또 "중국의 국가 주권 수호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아무런 근거 없이 비난하고, 중국과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를 이간질하고 있다"고 비난했음.
 - 국방부는 일본의 방위백서에 대해 강렬한 불만과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일본 측에 엄중히 항의했다고 덧붙였다.
 - 국방부는 특히 일본이 주장하는 '중국의 군사적 불투명성,' '중국의 레이더 조준,' '일본 영해와 영공 침범' 등은 사실과 다른 것이라며 이러한 일본의 주장은 국제사회에 중국의 군사동향에 대한 우려를 키우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웃기지도 않는 얘기"라고 공박했음.
 - 국방부는 "일본이 작년 다오위다오를 불법으로 매입, 중국의 영토주권을 침해하면서 양국간 심각한 대치국면이 발생했다"면서 "일본은 잘못된 행위에 대한 반성은 하지 않고 중국이 현상을 깨뜨렸다면 사실과 다른 주장을 내놓고 있다"고 공격했음.
 - 국방부는 "최근 일본이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군비를 확충하고, 공격성 전쟁 역량을 키우고 있다"면서 '중국 위협론'을 내세워 군비확충을 추진



하고 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비난했음.

- 국방부는 "우리는 일본이 침략 역사를 반성하고 평화발전의 길을 걷기를 희망한다"며 군비확충 중단을 촉구했음.
- 일본은 지난 9일 펴낸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가 하면 중국이 센카쿠에서 현상변경을 시도하고 영해 영공을 침범했다고 밝혀 한국과 중국의 반발을 불러일으켰음.

아. 중·러 관계

● <중국-러시아, 동해서 합동 해상훈련>(7/9, 연합뉴스)

- 사상 최대 규모의 해상 합동훈련에 들어간 중국과 러시아 군함들이 동해로 진출해 훈련을 벌이고 있음.
- 로만 마르토프 러시아 태평양함대 대변인은 8일(현지시간) 중국 전함 7척을 비롯해 모두 20척이 넘는 양국 전함과 지원선이 동해에서 '해상연합 2013' 훈련에 참가하고 있다며 러시아 함대는 '기함(旗艦)'인 바르야그 함이 이끌고 있다고 밝혔음.
- 러시아 해군 중장인 레오니드 부하노프와 중국 해군의 덩이핑 부사령관은 전함과 해군 병사 모두 합동 해상훈련을 위한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 부하노프 부사령관은 양국 함대 간 해상 훈련은 역사상 가장 큰 규모가 될 것이라고 반겼음.
- 중국 해군의 덩이핑 부사령관도 해상 훈련이 기상악화로 쉽지 않지만 러시아와 중국 전함 병사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음.
- 이번 훈련은 해상에서 양국의 공동 대응 능력을 향상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 지난 5일부터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 인근 포트르데제만 해상에서 연합 훈련을 벌인 양국 해군은 10일까지 해적 납치를 가상의 수색 및 구조 훈련을 할 계획임.

자. 기 타

● <더욱 강경해진 일본 방위백서, 미 협력 강화 강조>(7/10, 월스트리트저널)

-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를 통해 중국과의 영토 분쟁과 북한의 위협 증가를 언급하며 국가 안보에 더 큰 위협이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군사 능력을 증강하고 미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임.
- 일본은 아베 신조 총리 내각에서 처음으로 발표한 방위백서에서 지역 안보 문제와 이에 대한 대응 계획을 설명하면서 예전 방위백서보다 더욱 민족주의적인 표현과 경계하는 어조를 사용했음.
- 오노데라 이쓰노리 일본 방위대신은 백서 개관에서 일본을 둘러싼 안보 환경에는 여러 가지 과제 및 불안정 요인이 존재하며 그 일부는 "현재해지고 첨예해졌으며 더 심각해졌다"고 밝혔음.
- 일본은 다소 강한 어조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 우리 영토, 영해, 영공을 끝까지 보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아베 신조 총리는 동중국해의 무인 열도를 둘러싸고 심해지는 중국과의 분쟁과 증가하는 북한 핵 위협 등 지역적 도발에 강하게 대응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지난 12월 재집권했음.
- 이 두툼한 백서는 지역 안보 문제와 일본의 방위 능력 및 전략을 다수의 사진, 지도, 도표를 통해 상세히 분석했음.
- 아베 내각은 연간 지출 4조 6,800억 엔으로 국방예산을 0.7% 늘렸음. 일본에서 11년 만에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증액임. 백서는 또 일본이 향후 10년 동안의 방위 전략을 위한 방침을 설정하는 장기적 방위 정책 지침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음. 이 지침은 올해 안에 공개될 예정임.
- 백서는 이 지침에 어떤 내용이 포함될지는 상세히 밝히지 않았지만 자위대로서의 일본 군대의 역할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 두 가지 새로운 분야가 논의되고 있다고 강조
- 해외 적군 기지에 선제공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고 미국 해병대와 비슷하게 육해 공동 작전을 펼치는 군대를 신설한다는 것임.
- 백서의 어조가 가장 크게 바뀐 곳은 중국의 군사력이 급증하고 영유권 주장이 강해지고 있음을 설명하는 부분임.
- 일본 정부는 중국이 "국제법 질서에 어긋나는 독자적 주장에 기반하여 현상 변화 시도를 포함해 고압적인 전술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음.
- 또 "그중에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도 있어 이후의 방향성에 대해 불안을 느끼게 하는 면이 있다"고 덧붙였음.
- 지난 1월 중국 군함이 동중국해 인근의 일본 자위대에 사격용 레이더를 조준했다는 일본의 주장과 관련한 이 내용은 지난해 백서의 유사한 섹션에서 보였던 표현과 비교해 훨씬 공격적임.
- 예전 백서에서는 중국이 "고압적인 전술을 보이고 있으며 이후의 방향성에 대해 불안을 느끼게 하는 면이 있다"고만 적었음.
- 일본은 또 자국의 영해와 영공으로 간주되는 범위를 중국 선박과 항공기가 침범하는 것을 가리켜 "극히 유감"이라고 표현하며 중국 정부가 "국제 규범을 공유하고 준수해 주기를" 요청했음.
- 일본은 북한에 대해 핵무기 능력 증강과 탄도 미사일 개발은 "국제사회 전체의 현실적이고 긴급한 문제가 됐다"며 "매우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평했음.
- 백서는 지역 내 적대감의 증가로 일본이 미국과의 방위 협력을 강화함에 따라 전반적인 국가 안보 프레임워크 상 양자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미국과 일본은 최근 자국 방어 및 지역 안보를 위해 일본에게 더 큰 역할을 부여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방위협력지침 검토를 시작했다.
- 일본 정부는 또한 국방 전략 지침에 의해 미국이 아시아를 중점에 두는 데도 불구하고 군사 지출을 줄이라는 미 정계의 압박과 관련해 우려를 표하며 "심각한 재정 상황이 정책 구체화에 끼치는 영향이 주목된다"고 언급했음.
- 이번 방위백서의 또 하나의 특징은 자위대원들이 쓴 짧은 에세이가 많



- 이 포함됐다는 점임. 자위대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시도로 보임.
- 글을 쓴 자위대원 중 몇몇은 최근 북한이 무기 실험을 했을 때 미사일 방어를 준비했던 병사들이며 일부는 중국과 분쟁 중인 영토 최전방에서 순찰과 감시를 수행하는 병사들임.
- 중국 정부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았던 섬 상륙 훈련을 포함해 갈수록 빈번해지는 미국과의 합동 군사 훈련에 참여했던 병사들의 에세이도 있음.
- 방위성의 다쓰미 마사요시 대변인은 "많은 대중이 최전방에서 경계를 늦추지 않는 군인들의 목소리를 듣길 바랐다"고 말했다.

● <미국 공화, 국방장관에 미사일요격시험 재개 촉구>(7/12, 연합뉴스)

- 미국 상·하원 공화당 지도부가 12일(현지시간) 척 헤이글 국방장관에게 최근 실패한 미사일 요격 시험을 연내 재개하고 차세대 요격 미사일 개발을 최우선 과제에 올려놓으라고 촉구했음.
- 상원 군사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인호프(오클라호마) 의원과 공화당 중진인 제프 세션스(앨라배마) 의원, 그리고 하원 군사위원장인 벅 매키언(캘리포니아) 의원, 하원 정보위원장 겸 군사위 전략군소위원장인 마이크 로저스(미시간) 의원은 헤이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이같이 요구했음.
- 이들 의원은 서한에서 "지난 5일 실시한 미사일 방어(MD) 시스템 시험의 실패 원인은 아직 불명확하지만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MD망 시험 및 유지에 필요한 예산을 삭감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 또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 행정부가 지상 발사 요격 미사일(GBI) 시스템의 효율성 개선과 하나의 미사일을 여러 요격 미사일로 격추하는 새로운 시스템 개발, 미국 동부 해안의 추가 미사일 기지 건설 등 공화당의 요구를 모두 거부했다고 강조했다.
- 의원들은 북한이나 이란 등의 위협을 고려할 때 대륙 간 탄도 미사일(ICBM)에 대한 추가 요격 시험이 가능한 한 빨리 시행돼야 하며 외기권 파괴 비행체(EKV) 등 새 시스템 개발 작업이 곧장 시작돼야 한다면서 미사일방어청(MDA)에 관련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청했음.
- 이들은 "국가 미사일 방어 능력을 극대화해야 하며 신뢰도 또한 최고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미국 국방 당국은 지난주 태평양 마셜 제도 좌절된 함초의 육군 레이건 시험장에서 발사된 장거리 탄도 미사일 목표물을 4천마일(6천400km) 떨어진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 기지에서 중간 궤도의 요격 미사일을 쏘 격추하는 시험을 했으나 성공하지 못했음.
- 이는 2008년 이후 세 차례 시험에서 내리 실패한 것으로 총 16차례 요격 시험에서 8차례 성공하는 데 그쳐 요격률이 50%로 떨어졌음.
- 미국 국방부는 이번 실패에도 북한 등의 위협에 대비해 알래스카 포트 그릴리 기지에 14기의 지상 발사 요격 미사일을 증강 배치하는 계획 등은 그대로 추진된다고 밝힌 바 있음.

● 국제관계연구센터 제공